

데스크칼럼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이슈우화에 나오는 '파리와 꿀단지' 이야기다. 파리들이 달콤함에 이끌려 꿀에 발을 담그지만, 꿀에 취한 나머지 날개도 젖어 움직일 수 없게 돼 결국 죽음을 맞는다. 순간의 유혹이나 욕심에 휩쓸려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현상이 지역의 낙후는 물론 전체적 출산율을 낮추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지난 2023년 경고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과반의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집중도를 보이는데, 최근에는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의 약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집중돼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 단연 1위다. 반면 2~4위 도시의 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16위로 중하위권이다.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얘기다.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연구영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의해 자신

수도권 쏠림과 꿀단지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만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공연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연 시장의 매출 82.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공연 건수나 티켓 예매수 티켓 판매액 모두 수도권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019년 전남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를 묻은 결과 ‘더 나은 일자리(46.5%)’와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부족(25.4%)’이 1·2위로 꼽혔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분야는 국토균형발전 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문화예술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간 문화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소멸문제에 증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와 문화의 수도권 쏠림이 대한민국호를 침몰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재정 지원을 우대하는 원칙’을 내년도 예산부터 본격 적용한다며, 우대 대상과 방법은 서울로부터의 거리, 발전 정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저 지방을 배려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수도권에 대기업 집중→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서울권 대학 입학 경쟁 심화→지방 중소기업 인력난→지방의 인구감소와 기업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꼭 끊어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이 뒤쳐진 개발도상국일 때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인식됐지만, 이

제는 생산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한 프랑스, 일본 등이 30년 가까운 침체기를 겪으면서 지체되는 사안이다. 선진국 병을 앓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 인구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다.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과정에서 벌어진 이전 논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이전 논란 등에서 드러난 집단 반발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 검토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별집을 쭈셔놓은 것처럼 사생결단하러 드는 모양새다.

한예중 학생들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 중 수도권의 비중이 82.7%에 달하고, 전업 예술인의 50~60%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며 “정부의 서울 쏠림 현상 방식의 책임을 왜 한예중이 져야 하나”고 말했다. 수도권 문화 쏠림 현상이 문제가 있지만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다. 맞는 얘기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하지만 수도권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가세해 줄지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무래도 도를 넘은 것 같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높으며 문화를 누릴 기회도 월등히 높다. 대학 입시를 앞둔 지방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in) 서(서)울’이 목표다.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추세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할 도리는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것인가. 이대로 가면 결국 꿀단지 속의 파리들이 되고 말 것이다. 답을 빨리 알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지금 고쳐야 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래 후손들에게도 이 악순환의 굴레를 물려줄 것인가.

기고

조항원

광주 광산구의회 팀장
노무현재단 총동문회 기획이사



해마다 5월이 오면 광주 북구 망월동의 공기는 우리에게 목격할 질문을 던진다. 1980년의 그 비극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청년 세대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때로 교과서 속의 역사나 매년 반복되는 기념식의 풍경처럼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한 그날의 광주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연결됐는지 깨닫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고 믿었다. 그 진보의 동력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증명했다.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누고 치안을 유지하며 공동체 자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는 신민(臣民)이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기는 바로 그날, 깨어있는 시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에 깊은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1980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노무현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고 역설했다. 80년의 청년들이 금

오월 광주와 노무현이 건네는 말

남로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자유로운 미래였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날의 5·18 정신은 박제된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로 치환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 세대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세상은 거창한 혁명의 완성이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광범한 일상이었다. 사회의 중추가 된 우리는 직장 내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 존중하는 포용력, 그리고 편법과 반칙을 거부하고 정직한 따의 가치를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부모가 아닌 대화하는 파트너가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은 ‘선한 연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80년 광주가 보여준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또 우리는 ‘지식과 양심의 결합’을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뇌하며 자신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긴 정치인이다.

현대 사회의 청년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 하지만 5월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과 연결되는지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비판적 사고를 견지하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가져야 할 실천적 양심이다.

나이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세상’을 고민하는 것이다. 취업과 육아, 주거 문제 등 현실의 벽은 높지만, 그럼수록 우리는 각자도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80년 광주 시민들이 총알 앞에서 주먹밥 하나를 나눠 먹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지역주의와 정파적 갈등이라는 해묵은 장벽을 허물고, 보편적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 아래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비겁하게 침묵해 기득권의 편에 서기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고자 했던 노무현의 ‘바보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지표다.

결국 광주가 가야 할 길과 노무현이 가고자 했던 길은 ‘통합’이라는 커다란 바다에서 만난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도전했다. 5·18 또한 오랫동안 특정 지역의 아픔으로만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광주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바람 불면 바람에 맞서며 두뼘두뼘 걸어갔던 그 발걸음처럼, 우리 세대도 지역과 정파를 떠나 5월의 진실을 온전히 포용하고 서로에게 화해와 상생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야 한다.

오월이면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마주하는 영령들과 여전히 사무치게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께 깊은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 이제 우리는 그 미안함과 그리움을 등불 삼아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다시금 두뼘두뼘 함께 나아가야 한다.

취재수첩

시민 밥상 뒤흔드는 담합행위 철폐를

윤용성

산업부 기자



계란은 서민 밥상에서 빠지지 어려운 대표적 필수 식품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계란을 정바구니에 넣기 주저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모두 ‘계란 값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다’고 의문을 품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조치, 산란계 감소, 사료비 상승 등의 때문

이라고 여기고 납득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향하면서 그 답이 풀렸다.

대한산란계협회와 계란 가격담합 행위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국민 필수 식품인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해당 협회가 담합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는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까지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다.

원란 생산비가 같은 기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 2024년

4887원, 지난해 5296원으로 해마다 오름세 기준 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기준 가격의 지속적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 농가 보호나 산업 안정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가격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계란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근본 대책은 계란 유통 구조의 투명화와 가격 형성 과정의 정상화다. 밥상물가를 흔드는 가격 개입 행위는 단호해야 한다.

유통업체와 농가 간 거래 시 실거래 가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다.

사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됐지만...

‘광주의 오월’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제46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도 치러지고 있다.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이라는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시민축제’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에는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1980년 5월의 주먹밥 나눔을 재현하는 광주 공동체의 나눔과 대동 세상을 구현한 ‘시민난장’이 열렸다.

오후에는 5·18 당시 전남대학생들이 금남로로 행진하며 학내 민주화운동(전남대)이 다양한 계층과 세대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 행사가 이어졌다. 또 17일에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특설무대에서 사회자가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배우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마당극 형식의 전야제 또한 열렸다.

18일 오전 11시에는 5·18민주광장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공사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할 날, 이번 기념식이 열려 의미가 더 크다.

이처럼 반세기 가까이 흐른 ‘1980년 오월’을 기념하는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허탈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시대적 소명인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이번에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들의 합의속에 개헌안까지 담겨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며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구명 불능’ 처리된 집단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암매장과 행방불명 문제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여기에 국가 주도의 5·18 애곡은혜 사건이 어떤 경위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과제를 풀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진상규명조사기구 설치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한 ‘광주의 오월’ 주간이었다.

지역기업 ‘생존 전쟁’... 맞춤형 지원 절실

광주·전남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생존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원가부담 속에 공장 가동률 하락과 인력 감축, 자금 압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산업단지공단에서 최근 공개한 산업동향정보 분석 결과에는 이들 이 처한 현실이 드러나 있다.

미래차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광주 빛그린국가산단은 지난해 4분기 가동률은 78.50%로 집계됐다. 3분기 가동률(86.35%)보다 무려 7.85%p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전기요금 상승, 원자재 가격 부담 등이 겹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가동업체들도 대부분 영세·중소 제조업체다. 전체 가동업체 68개사 중 50인 미만 기업이 63개사이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4개사, 300인 이상 기업은 1개사밖에 없다.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공장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광주첨단국가산단도 가동률이 89.74%로 전분기(92.03%)에서 2.29%p 하락했다.

전남지역 국가산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불산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가동률이 71.68%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동업체 304개사 중 92%가 넘는 284개사가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서 조산업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자재 가격 부담, 숙련인력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석유화학 업체들이 집중돼 있는 여수 국가산단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미국·이란 간 전쟁 악재까지 겹쳐 있다.

철강산업 대표산단인 광양국가산단은 보호무역주의 대두, 중국발 저가공세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에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 국내 수요까지 급감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존 가동업체들마저도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경 채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문화체육부 370-7234	독자관리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서울지사 ☎978-709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사 진 부 370-705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